

보호무역 전쟁 <세계경제 1 편> (10/11/2012)

우리는 2012 년 하반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몇가지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본 내용중 일부는 장준하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 가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 배리 아이켄그린의 <달러제국의 몰락>등을 통해 인용하며, 지협적으로 추측해 보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비전문가적 사전임을 전제로 한다.

먼저지난달 연방준비 이사회(FRB)의 공개시장 위원회(FOMC)에서 발표한 제 3 차 양적완화(QE3) 조치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RB 가 돈을 푸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미국정부가 FRB 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FRB 가 자체 결정으로 시행할만큼 미국 경제가 심각하고 시급하다는 것이며, 정해진 기간없이 주택채권을 무기한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향후 경제상황이 예측불가라는 것이다. 이 조치가 있자마자 세계 각 선진국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무제한 자금을 풀기 시작한다. 유럽연합 중앙은행은 무제한적인 국채매입을 선언했고,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주 자산매입기금 규모를 10 조엔 더 늘렸다. 전세계는 이제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자국의 통화가 강세를 띠게 된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가만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중국은 10 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 이미 금융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시부양책이 언급되기도 했다. 그동안 비축해둔 막대한 자금을 자국내 내수시장에 풀겠다는 의지이며, 수출이 부진하면 막대한 규모의 내수 시장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각 나라가 무제한 자금을 방출하는 목적은 <무역전쟁>임과 동시에 <통화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다. 미국은 주택채권을 사들여 부동산 시장을 살림과 동시에 대규모 달러를 방출함으로써 달러가치를 낮추어 무역적자 폭을 줄이려하지만 다른 강대국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다.

또 다른 일련의 사건은 한국의 지적 재산권과 특허전쟁이다. 최근에는 ITC 가 애플·삼성전자의 특허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 7 월에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산(産) 세탁기에 최고 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미국 법원은 다국적기업인 듀퐁사가 제조한 코오롱 방탄섬유 판매금지 처분에서 듀퐁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프랑스는 "한국 노동자들이 하루에 12 시간씩 일하는 것도 불공정한 일이다."라고 한국 현대자동차의 덤핑여부 조사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요청하였다. 내세운 근거중 하나는 한국 노동자들이 프랑스 노동자들보다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프랑스에도 없는 노동문화를 거론하며 이른바 '근로덤핑'을 불공정의 근거로 내세운 저변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 들어 30% 이상의 판매 증가를 기록하며 프랑스는 물론, 독일 브랜드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한국의 자동차와 IT 전자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려 한다.

미국과 EU(유럽연합)는 지난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들이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무역규모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돌아온 것은 덤핑판정과 저작권침해, 특허침해였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자료를 인용, 직접적인 보호무역 조치라 할 수 있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에 한국이 해당된 경우를 찾아 집계한 결과, 올 들어 16 건이 늘어난 122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제소와 관련이 있는 것만 꼽아봐도 이 정도이고, 수입관세 인상이나 특별세 도입, 자국산 사용의무 부과, 수입절차 강화 등 수입상품의 경쟁력 약화에 초점을 맞춘 간접적인 조치까지 포함하면 규제는 훨씬 많아진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과 반독점법, 기술표준 위반 등 주로 내국법에 기준해 한국 기업들을 압박했다. 반면 브라질과 멕시코,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은 수량제한이나 통관절차 강화, 수입관세 인상, 자국산 사용의무화 등을 강조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데서 부담이 적지않다.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한 사례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미국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진다. 1995년부터 2011년 말까지 미국의 WTO 무역관련 제소건수는 109건을 기록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반덤핑 관세 관련 제소건수는 458건을 기록해 인도에 이어 2위였다.

상대방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트집 잡기 위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건수는 10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었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무역적자를 막기 위한 미국의 공여지책이다. 미국의 무역적자 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5600억달러를 기록해 2010년보다 600억달러가 늘었다. 보호무역 전쟁과 환율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30년 이상 개발도상국들을 위협해 왔던 <자유시장> 경제이론과 <자유무역>의 선전구호는 막을 내리고, 그 주창자들(미국과 유럽연합)이 먼저불공정한 <보호무역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막판에 쫓기듯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일까. 공정한 게임은 세계역사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정녕 몰랐던 것일까.